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발표자료

신용카드가맹점의 모바일 결제수수료를 낮추는 거래중계 서비스

2019.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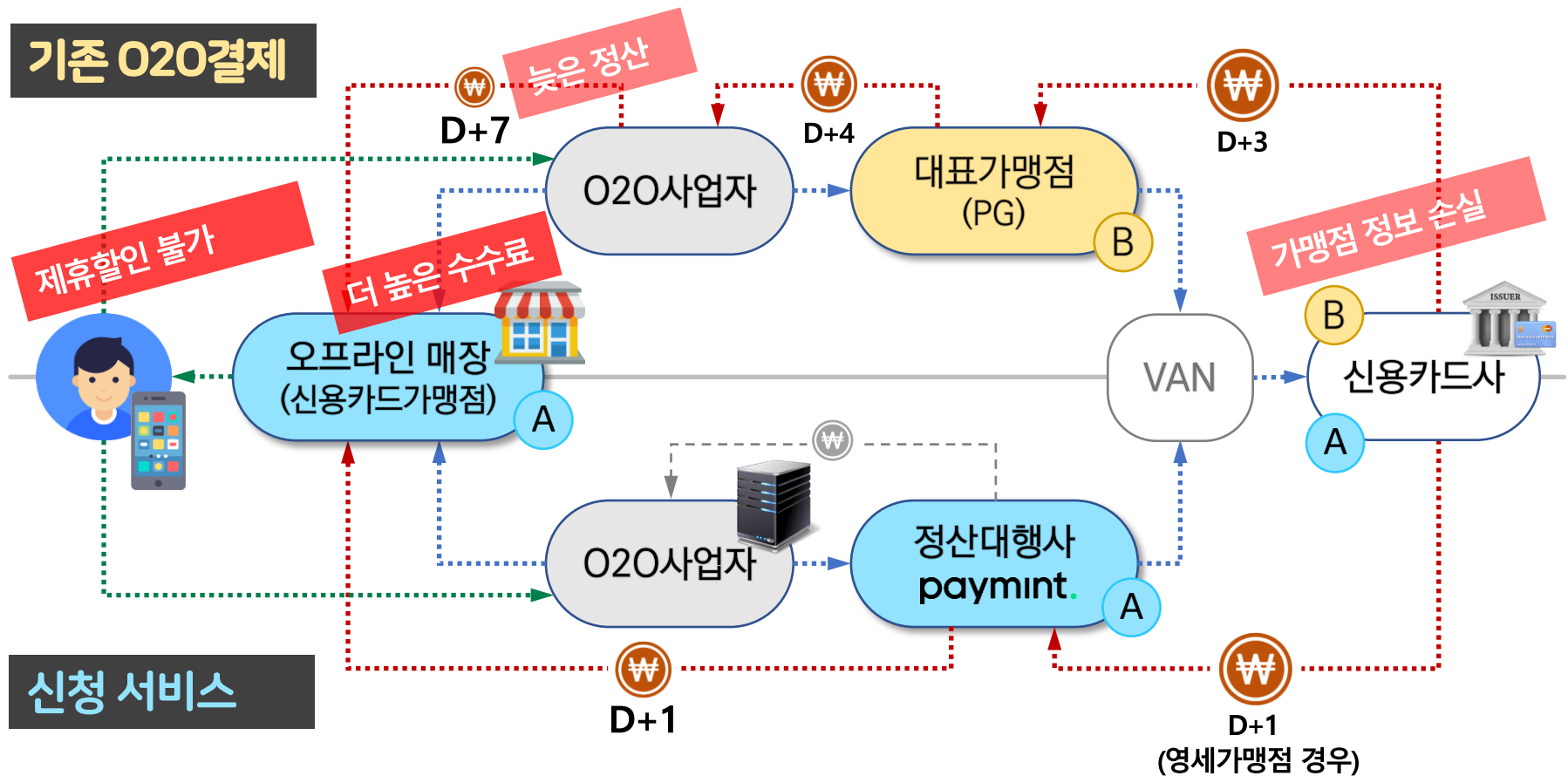
paymint.



신청 서비스 소개

- O2O 결제를 온라인 결제방식으로 처리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 가맹점의 모바일 결제시 **빈틈 없는 우대수수료 적용, 빅데이터 수집** 실현
- 고객, 가맹점, 카드사, O2O사업자 모두에게 편익이 발생하는 합리적 대안

기존 O2O결제



신청 서비스

(A) (B) 신용카드가맹점번호

혁신성과 편익

낮은 수수료, 빠른 정산

완벽한 우대수수료 적용

변경 투자 최소화

가맹점 정보 왜곡 해결

경쟁촉진, 시장 투명성 강화



카드고객

“모바일 결제에서도
제휴할인이 되네!”

- ✓ 모바일 결제 편의성 증가
- ✓ 신용카드사 할인 혜택 유지
- ✓ 중소매장에서 핀테크 사용



카드가맹점

“O2O 결제수수료가
많이 낮아졌구나!”

- ✓ 낮은 수수료의 O2O서비스
- ✓ 오프라인 결제 기준 정산
- ✓ 빈틈 없는 우대수수료 적용
- ✓ 핀테크로 추가매출 발생



신용카드사

“이제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겠다!”

- ✓ 가맹점 정보 왜곡 해결
- ✓ 모바일결제 빅데이터 분석
- ✓ 가맹점 리스크 저감



O2O사업자

“정산시스템 개발
안 해도 되겠네!”

- ✓ O2O 스타트업의 시장진입
- ✓ 전금사업자 규제 부담 완화
- ✓ 불법적 재정산 구조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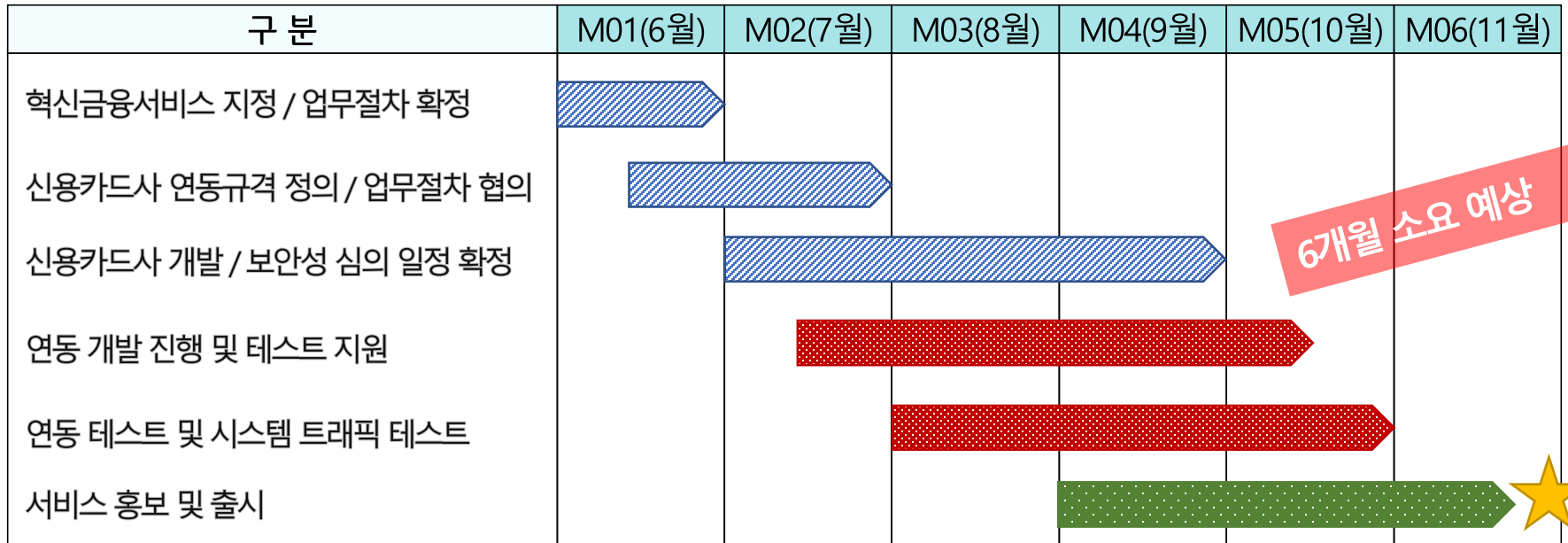
특례 적용의 불가피성과 개발일정

특례 적용 관련 규제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5 가, 나
-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요청 사항

- 신용카드 가맹점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위 ①의 넓은 해석 또는 적용배제
- 신용카드 가맹점의 정산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위 ②의 적용배제



코나 계모임 플랫폼 서비스

코나아이(주)

KONA

Copyright ©1999-2019 KONA I Co., Ltd.
All Rights Reserved.

신청 서비스 소개

■ **코나 계모임 플랫폼 서비스**: 지인들이 모바일 선불전자지급수단 플랫폼을 통하여 계모임 개설, 매월 갯돈 불입, 계순번에 따른 갯돈 수령, 연체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계모임 관리 서비스

• **계(契)** : 우리나라 전통의 자발적인 민간협동모임으로 친목과 더불어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며, 순번제의 경우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갯돈을 모아 매달 한 사람씩 몰아주는 형태로 운영함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오프라인 계모임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p>■ 시공간 제약 - 계모임 개설, 운영, 갯돈 불입/수령을 위해 계원들이 자주 대면할 필요성 존재</p>	<p>■ 계모임 운영의 효율성/편의성 제고 - 언제든지 어디서든 모바일 앱을 통해 계모임 개설/운영/관리 가능 -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앱(충전금 양도)을 통한 계원간 갯돈 직접 불입 및 수령</p>	<p>■ 계원의 측면 - 계모임 운영의 효율성, 편의성, 투명성 제고 - 갯돈 미불입 발생 즉시 통지, 연체 지속 시 사고계 지정 및 파계 처리를 통해 사고 발생의 리스크 및 손해범위 최소화</p>
<p>■ 별도 계좌/장부 필요 - 갯돈 관리를 위한 번거로움</p>	<p>■ 계모임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갯돈 불입, 수령, 연체 등 자금 흐름 실시간 통지 - 갯돈수령 예정표 등 계모임 관련 기본 정보를 실시간 확인 가능 - 파계시 정산내역 확인 가능</p>	<p>■ 사회적 측면 - 계모임 운영의 투명화, 리스크 최소화를 통해 계모임 양성화 - 계모임 활성화를 통해 지인간 상부상조 정신 구현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p>
<p>■ 계모임 운영 불투명 - 계주 등 특정 계원에 갯돈 관련 정보 및 갯돈 흐름이 집중됨</p>		
<p>■ 미불입 사고 리스크 - 연체 사고 발생하더라도 정보 부재로 대응 지연, 손해 확대</p>		

규제특례의 불가피성과 개발 일정

■ 규제특례의 불가피성

규제 관련 규정	규제 특례 요청 사유
대부업 등록	- 계원이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할 경우 서비스 가입 장벽이 높아져 서비스 활성화가 어려움
대부중개업 등록	- 회사에 대한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중복 규제로 서비스 출시에 장애가 됨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대부중개업 겸업 금지	- 회사가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있으므로 겸업 금지에 따라 서비스 출시가 불가능함
미등록대부업자 대부중개 금지	- 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계원들의 미등록대부행위에 대한 대부중개로 금지될 경우 서비스 출시가 불가능함
차입자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 차입자인 켓돈 기수령자로부터 플랫폼수수료 수취가 금지되고, 더 큰 리스크를 부담하는 켓돈 미수령 계원들로부터만 플랫폼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플랫폼 이용 수수료라는 이미지가 퇴색함

■ 서비스 개발일정



지속가능 여신(Sustainable Lending)을 위한

'중소기업 지속가능성(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Who's Good
www.whosgood.org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객관적인 '중소기업 非재무 여신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에서 '지속가능 여신'(Sustainable Lending)¹⁾을 실현하고자 함

(배경)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심사의 문제점

신용등급 정보의 적시성 저하

- 회계정보에 과도하게 의존, 신용등급 변경속도가 느려 신용위험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에 한계
- ⇒ **회계정보 의존도 축소 필요**

정성적 평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미흡

- 여신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평가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움
 - 실제 위험 대비 '보수적 산정' 가능성이 높음
- ⇒ **非재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

신청 시점의 신용도 평가

- 대출신청 시점의 신용도를 보고 대출 여부 판단
- ⇒ **미래 성장가능성 평가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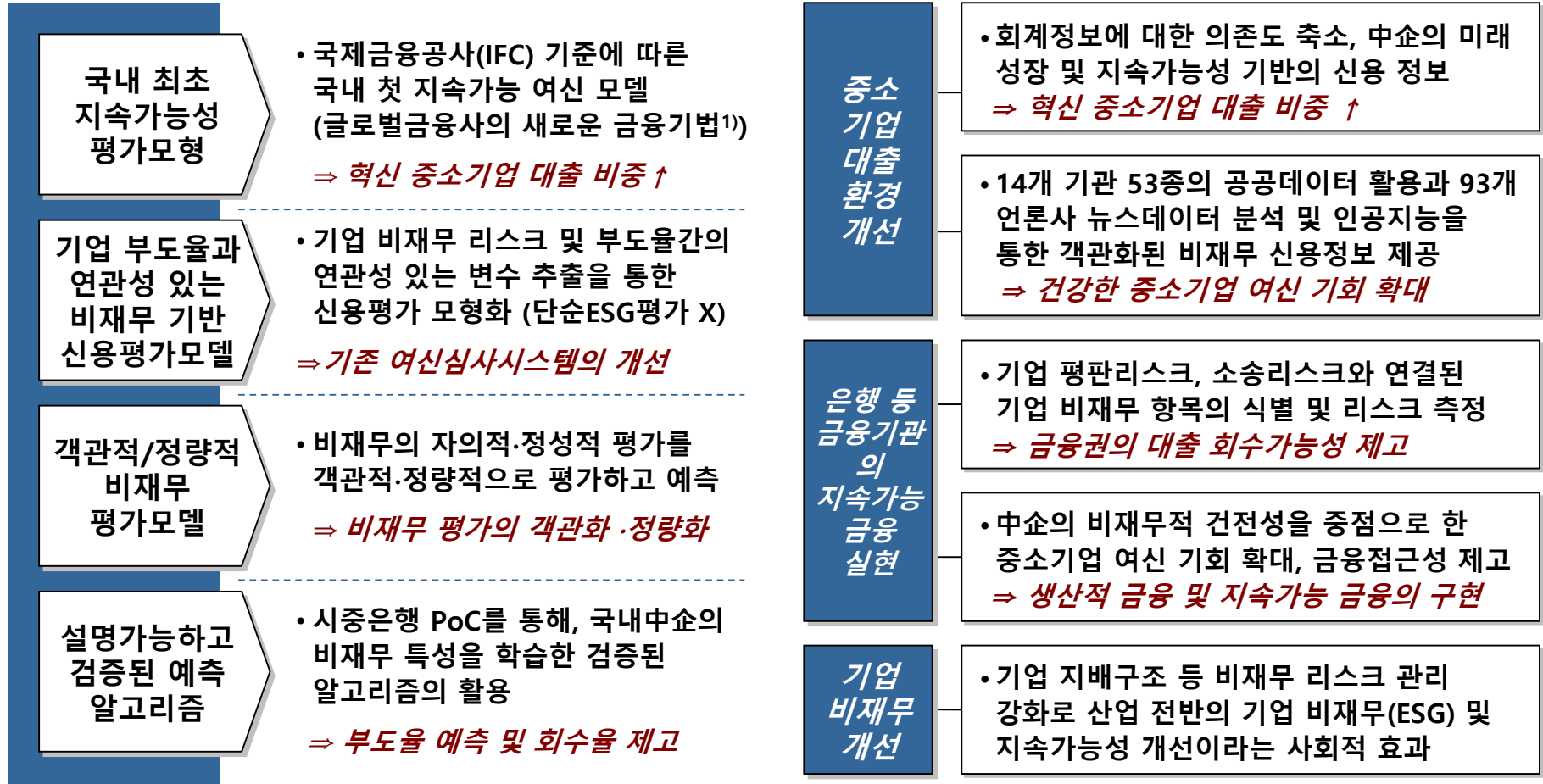
1) 지속가능 여신 : '지속가능 금융'의 하나로, 대출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성과)을 고려하는 것

2) ESG: Environment, Social & Governance의 약자. 기업의 '非재무'를 구성하는 대표 항목이어서, 통상 비재무를 지칭함

국내 중소기업의 특성을 학습한 알고리즘과 글로벌 기준에 따른 여신심사 모델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개선 및 '지속가능 금융' 구현에 기여함

지속가능성 (신용)정보 서비스의 혁신성

사회적 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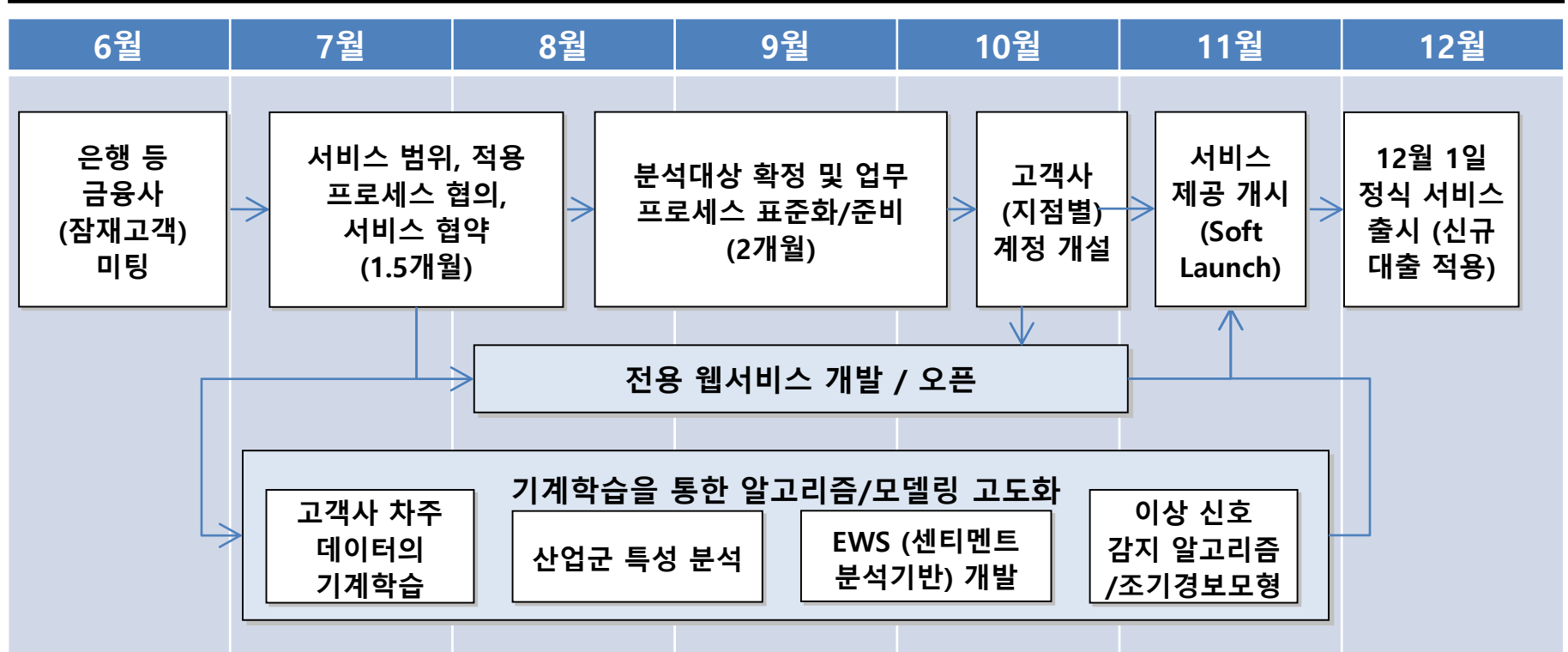
1) 해외 사례: SASB, ING, Fitch Ratings, DZ Bank, West LB, DNB, SEB, Raiffeisen Bank, Euler Hermes 등

3.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과 개발 일정

이 서비스는 '신용정보업'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대상이어서 특례적용이 불가피함. 모형 완성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진행 예정임

- 신용정보법 제4조 1항 1호 : 신용조회업
- 동법 제4조 2항 :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법 제50조 2항 1호 : "인허가 없이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선정 이후 개발 일정



SMS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

2019. 6. 10

1. 서비스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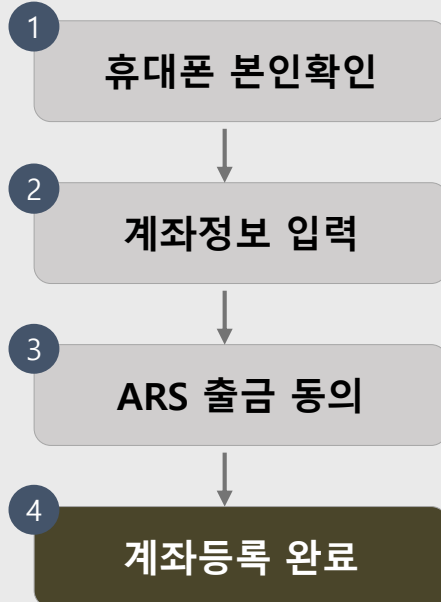
- ✓ 간편 현금결제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나 OTP없이 사전에 고객 출금동의를 통해 등록된 은행 계좌를 활용한 현금결제 서비스
- ✓ 간편 현금결제를 이용하기 위한 고객의 계좌등록 시, SMS를 활용한 **계좌출금 동의를 간소화**

현행

동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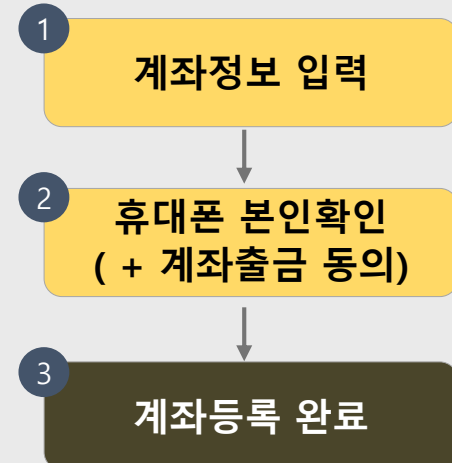
- 출금 동의 시 ARS를 통한 동의 방법이 불편함

프로세스



개선

- SMS 활용한 휴대폰 본인확인과 계좌출금 동의 동시 진행으로 간소화



2. 서비스의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

혁신성

“사회적 비용의 절감”

① 결제시간 단축

⇒출금동의 소요시간 단축 : 30~40 초 → 10~15초

② 결제 성공률 증가

⇒동의사항 인지율 향상 (음성 → 문자)

⇒ARS 동의 실패율 감소

③ 인증 비용 절감

⇒ ARS 인증비용 → SMS 인증비용

④ 안전한 출금 동의 구현

⇒ 사고 발생 방지 방안 마련으로 간편하고 안전한 동의 프로세스 적용

⇒ 가맹점 및 판매 상품, 이용자 제한을 통해 위험 방지

소비자 편익

■ 고객

- 1) 현금결제 편의성 향상
- 2) 출금동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 3) 현금결제 이용 증가로 합리적인 소비

■ 가맹점

- 1) 결제 수수료 절감 및 결제 성공률 향상
- 2) 빠른 정산 지급 주기로 자금 유동성 증가

3.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및 개발 일정

규제특례 적용 불가피성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 출금동의의 방법은 서면, 녹취, 전자문서, ARS만을 한정

특례 내용

현재 법정화 된 방법에 SMS를 활용한 출금동의 방법을 추가 허용

특례 요청 사유

- 1)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출금동의 방법 필요
: 동의 내용 인지율 증가, 결제 실패율 감소
- 2) 특례 적용의 부작용 가능성이 적음
 - SMS 인증으로도 법 취지에 맞는 출금동의 부인방지 가능
 - 사고 리스크 높은 상품 구매 제한 (환금성 상품 등)

개발 일정

준비 (~'19.6월)

- 혁신서비스 지정
- 세부업무 기획

개발 (~'19.8월)

- SMS 출금동의 프로세스 개발
- 적용 가맹점 시스템 연동

출시 (~'19.9월)

- 서비스 출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 평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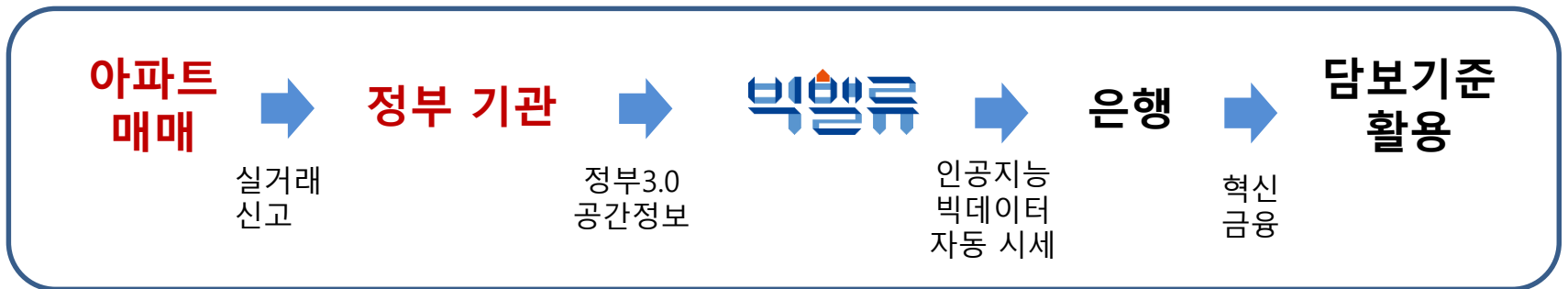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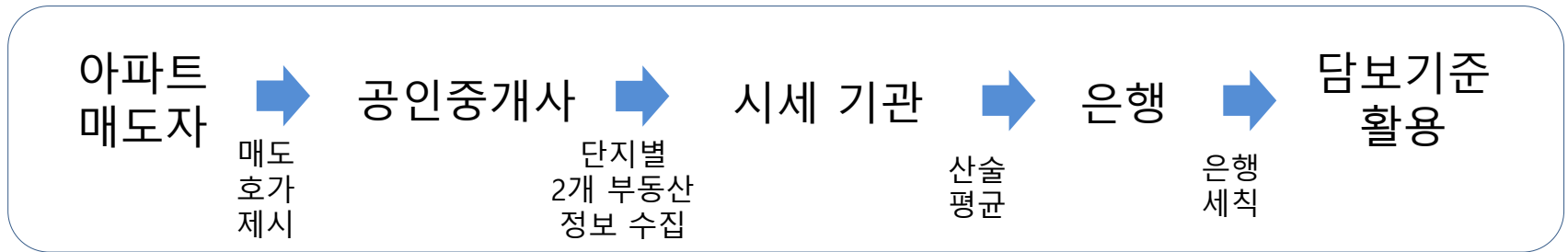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보도자료용>



빌라시세닷컴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정확하고 객관적인 아파트 시세 정보를 제공

기존 시세 산출 방식



혁신 금융 제안 방식



기존 시세의 한계점을 혁신 기술로 해결



기존 방식



혁신 금융

아파트 매도자	아파트 매매 거래	편향되지 않은 원천 정보 확보
공인 중개사	정부 기관	정보의 공신력 확보
산술 평균	인공지능	소형단지, 거래 적은 단지도 정확한 시세 제공

은행 편익

- 중립적인 시세 정보 확보
- 소형 아파트 시세 확보
- 리스크 통제
- 비대면 금융/혁신 금융 추진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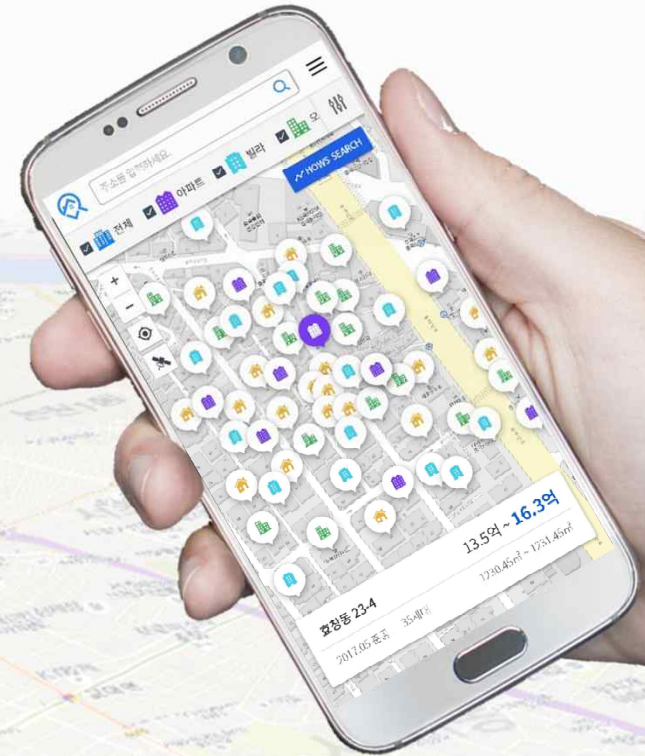
- ✓ 은행업 심사업무의 특성상 은행업 감독규정 위반성의 해소 없이 혁신 서비스 도입과 확산이 어려움
- ✓ 호가 기반 시세와 실거래 빅데이터 기반 시세를 이용자가 비교, 선택할 수 있는 테스트 기회 필요
- ✓ 서비스 이용자인 은행이 과거 대출 정보 및 서비스 비교,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테스트로 인한 시장 위험성 낮음

서비스 개발 일정 : 서비스 실시까지 5개월 소요 (10월 예정)

AVM을 활용한 지능형

Automated Valuation Model

주택금융 심사 서비스



1. 서비스 소개

AVM (Automated Valuation Model) – 서비스 개요

AVM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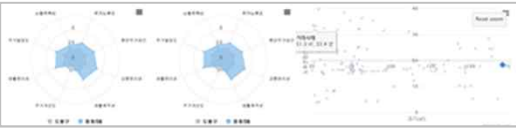
실시간 주택가격 자동 산정 모형으로 국내 모든 공동주택 호별 정보를 서비스



추정 시세(임대) 및 가격변동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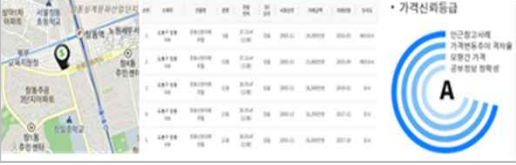
도시환경 및 수급동향/ 포지셔닝 분석



담보물 특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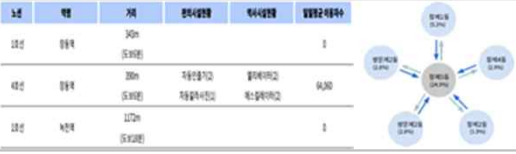
유사매매사례 및 신뢰도 분석



담보물 환경 분석

구분	단지정보	동정보	호정보
세대수	340세대	사용승인일자 2003-02-01	계당층 11층
대지면적	2448.60㎡ (741평)	승강기 유무 있음	권유면적 37.31㎡ (11평)
총 주차대수	199	지상/지하승수 148/5승	공유면적 33.25㎡ (10평)
전용면적	1415.49㎡ (428평)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합계 70.56㎡ (21평)
면적비율	27564.10㎡ (8338평)	지붕 (철근콘크리트, 평상)	대지지분

교통 및 인구이동 네트워크 분석



핵심가치



Make Smarter Decisions



Accurate and Trusted



Instant Deliv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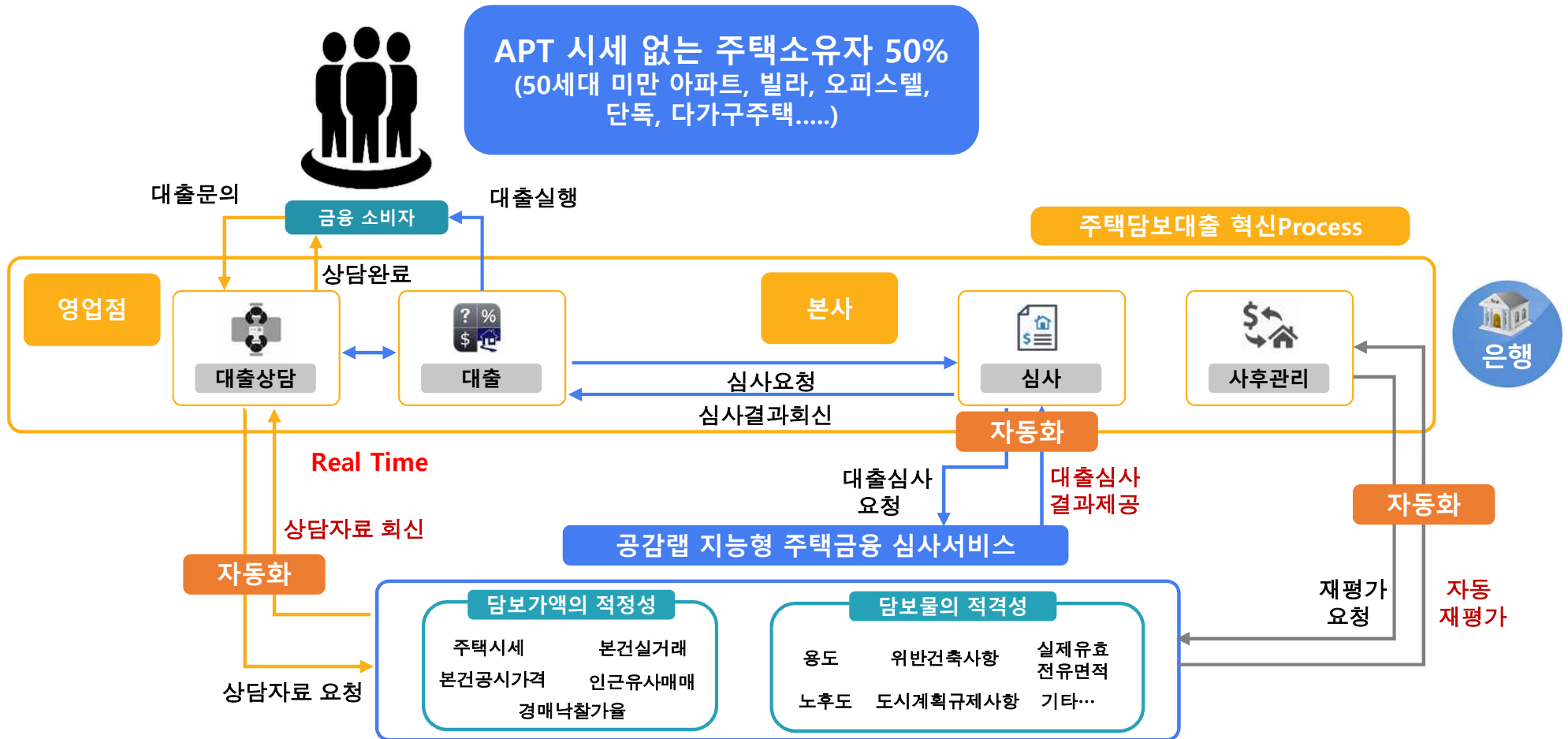


Backed by Howsmuch

2. 서비스의 혁신성과 편의

AVM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정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VM 기반 지능형 주택금융 심사 서비스는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와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합니다. AVM은 KB시세가 없고, 중·서민층이 거주하는 非아파트 주택의 금융 심사에 우선 활용됩니다.



3. 규제특례적용의 불가피성

AVM 단계적 도입 등 주택담보가치 산정기준 혁신을 유도하는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AVM 제도적 허용 사례 검토를 통해 금융기관 혁신기술 기반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 선도

오랜 기간 개정 없이 적용되어 온 금융 관행 개선으로 혁신서비스가 뿌리내릴 환경조성 필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 2 <별표18>

은행은 다음의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아래의 평가방법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 (2) 감정평가액 이내
- (3) 한국감정원 시세 이내
-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 이내



혁신금융서비스 : AVM 활용 지능형 심사 서비스

1. **KB시세 없는 아파트**(50세대 미만) 경우 AVM 활용 허용 필요
2. AVM 활용기준을 갖춘 은행의 경우, **LTV 산정 기준으로 적용 가능 해석**

美여신당국 담보가치산정 가이드라인(IAEG)은 USD250K 이하의 금액을 대출시 가치산정(evaluation) 주요 도구로서 AVM을 제시
최근 보도에 따르면 USD400K 이하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나타남.

※ Interagency Appraisal and Evaluation Guidelines

IAEG Xi. Transactions That Require Evaluations

The Agencies' appraisal regulations permit an institution to obtain an appropriate **evaluation** of real property collateral in lieu of an **appraisal** for transactions that qualify for certain exemptions. These exemptions include a transaction that: Has a transaction value equal to or less than the appraisal threshold of \$250,000.

IAEG Appendix B. Evaluations Based on Analytical Methods or Technological Tools

Automated Valuation Models (AVMs)

AVMs are computer programs that estimate a property's market value based on market,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Institutions may employ AVMs for a variety of uses such as loan underwriting and portfolio monitoring.

